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투명성 높인다(23.4.14)
- ② 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23.4.13)
- ③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화됩니다(23.3.30)
- ④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보상금 등 총 6억 3천여만 원 지급(23.4.11)
- ⑤ 국민권익위, 국내 거주 외국인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23.3.31)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투명성 높인다

주관적 평가인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방지, 알권리 증진 위해 제도개선 권고”

(23. 4. 14. 국민권익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

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 (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하면 부정한 청탁이 사라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

국민권익위, 지자체 감사·보조금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성과 공유·공공재정 누수 방지 방안
논의

(23. 4. 13. 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20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감사 및 보조금 집행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투명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2023. 2.) 부정수급 환수 이행권고 대상기관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내용과 지난 3년간 제도운영 경험,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관련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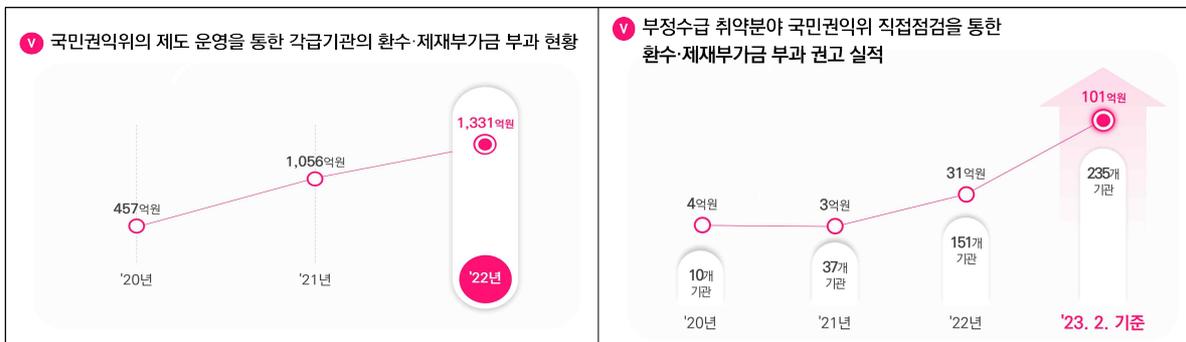
또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은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고·지방보조금 집행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행정안전부 담당자를 초청해 주요 부정수급 사례 및 대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남·제주(5월), 강원(6월), 호남(9월), 충청(11월) 등 권역별로 워크숍을 실시하며, 각급기관 수요에 맞춰 교육 대상 및 내용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제정돼 다음 해 1월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집을 배포하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홍보영상·책자 배포 등 대국민 홍보 ▲각급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 조사 ▲환수·제재부가금 처분 미흡기관에 대한 이행권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 2022년 부과 현황 자료는 잠정 집계치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확정 실적은 2023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증가, 부정 청구 근절 인식 확산 등 성과는 각급기관 담당자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적 건전재정 기조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 권역별로 공공기관 대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교육
실시

(23. 3. 3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신고 등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민원형태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감사나 민원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민원 형태의 신고인 만큼 각 기관의 부패·공익신고 접수 처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 및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전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재개한다.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총 6개 권역을 선정, 11회에 걸친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 세종·충청 권역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가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 세종·충청(3.31.), 서울·경기(4.12, 4.17.), 경상(4.20.~21.), 제주(5.1~5.2.), 전라(5.25~26, 7.7.), 강원(6.16.)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강사로 참석한다.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유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 신분 유출 예방 방법 및 부패·공익신고자 색출 시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한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는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철저히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이번 권역별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고자 신분 유출이 철저히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보상금 등 총 6억 3천여만 원 지급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45억 5천여만 원

(23. 4. 1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ㄱ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 4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총 1억 4,442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천 835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ㄷ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여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8천 487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내 거주 외국인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서비스 관련 간담회 개최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권 6개국 주한 외국대사 등 초청

(23. 3. 3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권 6개국* 주한 대사 등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주한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미얀마, 몽골,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서비스”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용을 당부한다. 또, 주한외교사절단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올해 11월로 예정된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해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부산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응원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는 언어장벽으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놓

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민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도 민원을 상담·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도 3개 외국어를 시작으로 최초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6년도에는 14개 언어로까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오고 있다.

〈 참고 : 외국어 민원창구 운영 개요 〉

▶ 재외동포·국내 거주 외국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외국어 민원창구 개설('08.6.~, 영·중·일어를 시작)
 - 14개 외국어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언어로 답변 확인 가능

개통년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6년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니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 외국어 민원건수 현황

구분	'08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원언어	3개		14개	14개	14개	14개	14개
민원건수	179건	...	1,630건	6,346건	24,642건	53,733건	22,046
					(합)100,421건, (평균) 33,47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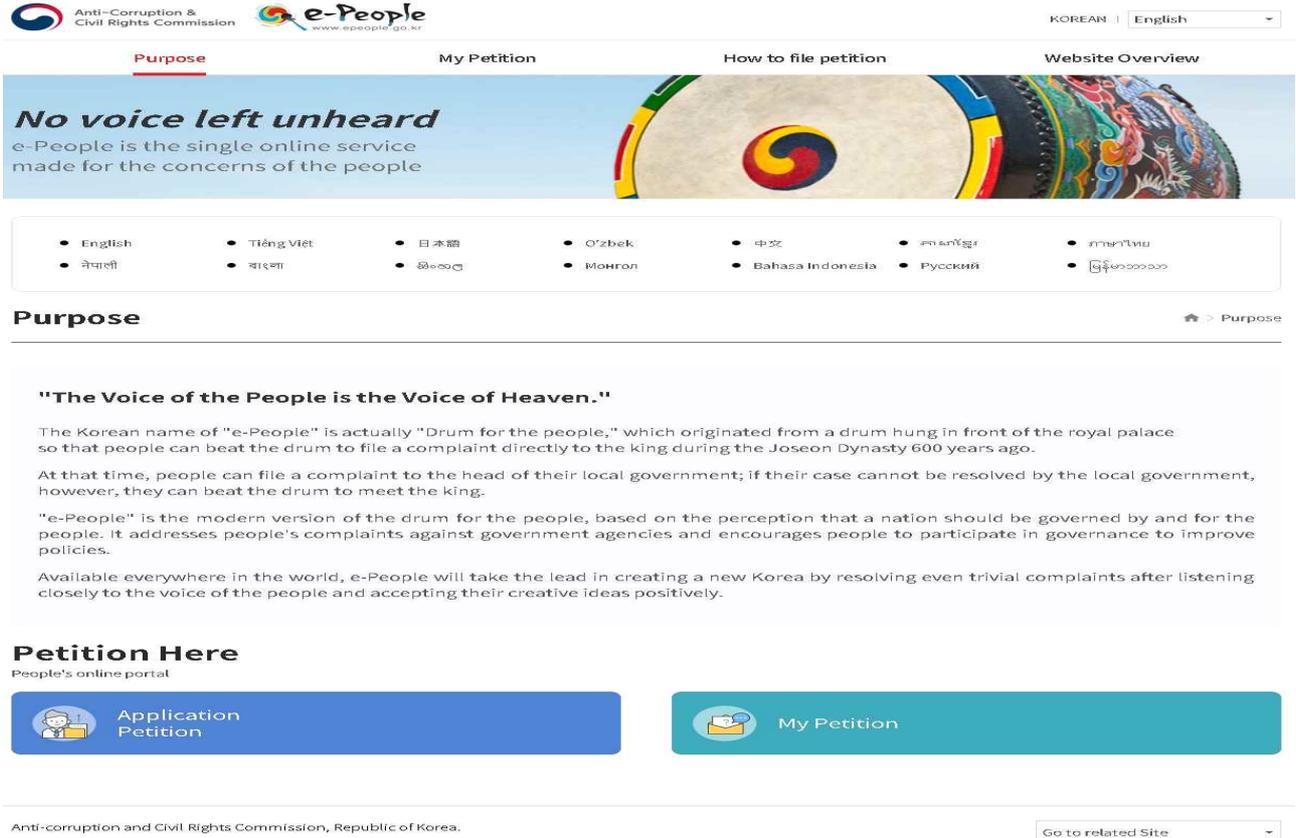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약 33,400여 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되는 등 외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는 외국인의 권익구제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중·일·러시아어를 제외한 외국어에 대한 민원서비스 이용이 다소 저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얀마, 몽골,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6개국의 자국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한 점을 알리며 대상국의 적극적 관심과 홍보를 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국민권익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한 외교대사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2030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민원창구 화면 >



< 외국어민원 처리절차 >

